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11
제67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u.kr ISSN 2671-9754

02

제388회 임시회 폐회



03

주요 이슈



08/09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제주 감귤...이렇게 맛날수가 제주섬 곳곳이 노랗게 맛이 영글고, 가을이 시나브로 깊어가고 있다. 도민 땀방울로 빚은 보석, 한 알씩 챙겨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제주형 뉴딜정책 도정과 협력, 견제 감시도 함께” 제388회 임시회 폐회, 제주형 지역화폐 조례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30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월 중으로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2년까지 총 3,7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날 2,925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협재·예래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도 의결했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제주형 뉴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보탬 수 있다면 도정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행보를 막을 이유가 없고, 그동안 지사는 대권 도전 결심이 서면 도민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어 도정공백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우선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행보를 막을 이유가 없고, 그동안 지사는 대권 도전 결심이 서면 도민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어 도정공백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우선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폐회사

“대권도전 앞서 ‘도민 신뢰’ 먼저 얻어야” 제388회 임시회 폐회사, ‘송약선언’ 실현방안 지적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0월 30일 제388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지사의 대권행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그동안 지사께서는 대권도전 결심이 서면 도민들에게 먼저 알려겠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제주에서 도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으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전국 최하위 제주도 청렴도까지 거론돼 도정을 먼저 챙기라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도정공백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우선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 지사의 ‘송약 선언’ 발표와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염려도 크다.”면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향후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또 “의회의 협치 행보에 대해 도민들로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서,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제주형 뉴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도정과 협력할 것은 하겠다.”면서도, “도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최근 강정 정수장 수돗물 유출 발생 사태와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아기 입양 게시글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도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호사각 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은 없는지 보다 촘촘한 정책설계와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좌 의장은 제주발전을 위한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역할론도 당부했다.

좌 의장은 “JDC 추진사업에 감면받는 지방세만도 1,000억 원이 넘고 있는데 세제감면 혜택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해 제주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훼손,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의 전국 최하위 실적, 내부 감질 문제까지 공직내부의 공정과 청렴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 5분 발언

“평화대공원 조성으로 갈등 치유”

강민숙 의원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강민숙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화의섬 제주에서 평화의 상징이 돼야 할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선택됐음에도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국방부·국토해양부와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됐다.

2011년에는 국유재산 무상 양여 근거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선정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체부지 제공 양여’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약 이행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제주도정도 사업추진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지금 제주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개발로 강정공동체는 해체되고 있고, 동물테마파크, 송약산, 제2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비롯된 찬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처럼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너털너털해진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돌과구조차 후속사업으로 밀려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께서는 세계적 자연자원의 가치로 평가받

고 있는 송약산 개발에 대해 개발 반대의 논리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의회가 제동을 걸기 전까지 4년간 묵인하고 있다가 대선행보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청정제주 송약선언’으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며, “평화의 섬에 맞는 도민화합을 위한 행보보다는 정치적 이해도에 따른 양두구육과 같은 행정 처리는 지역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런 갈등의 섬에서 치유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평화대공원 사업이다. 특별법 제235조에 입각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섬 안에서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유정책이 필요하다.”며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광폭 행보

16개 시·도의회 방문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협조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우군 확보를 위해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좌남수 의장과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은 10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건의했다.

이는 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시·도의회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14개 시·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9월 17~18일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북, 세종, 대전, 충북을 방문한 데 이어 9월21~22일에는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은 3차 방문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하는 등 불(Boom)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좌남수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올해가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4·3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을 위해 연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과 유대관계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요이슈

김태석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갑·사진 왼쪽 3번째)이 대한민국 헌정회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헌정대상'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10월 14일 오후 3시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헌정대상 시상식을 열 김태석 의원에게 대상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자는 김태석 의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에서는 김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년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인사권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인력 증

원, 그리고 경제와 균형의 제주형 지방의회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또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 컨퍼런스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제를 선도하고 성공적 개최와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호응을 얻었다.

김태석 의원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등 도민주권 실현을 주도적으로 펼쳤고, 전문성 지원 강화로 의정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역대 의회 중 의원 입법활동 조례제·개정안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성민-김황국 의원,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제4회 청년의날 기념, 강성민 종합대상-김황국 정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사진 왼쪽)과 김황국 의원(용담1·2동, 국민의힘·사진 오른쪽)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관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과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청년친화 우수광역·기초단체와 청년친화 우수광역의원을 선정·발표했는데, 청년친화 우수광역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의원 중 22명이 수상했고,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강성민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청년회 창립 주도 및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지원 등 청년활동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했고, 의회 입성 후 제주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동발의, 청년 문제 연구모임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 창립, 제주민생경제포럼 창립을 통한 청년민생 및 주거정책 개선 정책을 추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성민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정활동과 관련 정책의 추진은 보다 건강한 사회,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집중해 왔다."면서, "후반기에는 청년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시대에 청년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청년정책이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했다.

정책대상을 수상한 김황국 의원은 제주지역에 청년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부터 청년정담회(青年情談會)를 기획, 9회에 걸쳐 개최해 청년들과의 소통기구를 정립하고, 약 1년5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10대에 이어 11대 의회까지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청년정책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고, 도민 사회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례조사 결과 공유집 등을 발간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황국 의원은 "본인의 의정활동을 하나로 엮는 주제는 바로 '청년'으로, 제주에 청년정책의 디딤돌을 놓은 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 더 집중해서 청년정책의 완성을 이뤄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김경미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5월 27일 '맑은 정치', '생활정치', '평등정치'를 모토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전국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 단체로 전국의 1,060여명의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여성의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회의 성 평등한 의정활동과 성 평등한 정책결정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성평

등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등의 의정활동 사례 공모로 '평등정치'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 성평등 포럼'을 창립하고 지역 내 조례제정 관련 의견수렴 및 성평등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의 검토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최다의원 공동발의 및 대표성을 가진 의원 전원이 참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의회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성평등 인식 확산과 정책 실현에 기여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4·3평화공원 참배로 공식활동 시작”

제11대 제주도의의회 하반기 4·3특별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월 17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오전 11시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43명령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추모했다.

특위 위원들은 43위령제단에 분향한 뒤 묵념을 하며 43명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강 위원장은 방명록에 “4·3

특별법 개정으로 좀 더 정의로운 제주를”이라고 적으면서 연내에 43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유족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복지확대, 4·3특별법 연내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회운영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비대면 원격 출석 근거 마련 김용범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0월 2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

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여러 안건들 중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통과됐다.

김용범 위원장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하원에서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회 및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원격화상회의와 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가능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

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출석을 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원격 출석·발언 및 표결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용범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도의회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업무정지 상태(Shut down)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며, 향후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서 비대면-원격화상 참여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함께 주문했다.

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도민역량집중 4·3특위, 활동계획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사진)은 10월 28일 제388회 임시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3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군법회의 유죄 판결 무효화 및 명예회복, 생존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4·3공동체 회복 등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도민사회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3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 활동 강화와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각 지방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도 "종교계도 4·3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및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에 빠져 있어 향후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시에 추가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축 △ 생존희생자 및 유족복지 확대 △ 유족지원 확대를 위한 T/F팀 구성 △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 세계 각국 청년·대학생 4·3역사교육 △ 4·3의 정명 찾기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간담회 △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4·3특별위원회는 11월에 진행되는 4·3전문가 간담회, 4·3유족간담회, 4·3유관기관간담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와 정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국민 공감대 확산 및 특위활동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4·3특별법 통과 위해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4·3 전문가 간담회 개최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0월 29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4·3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4·3특별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 4·3기념사업회 강호진 집행위원장, 양성주 조직위원장, 강덕환 제주작가회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그 동안 정부에서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조성, 희생자 추념일 지정, 트라우마센터 개소 등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는 미온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연내 특별법 개정 노력을 위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72년 전 그날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 영문도 모른 채 빨간 동백으로 산화되어 갔던 유족들의 아픔을 알기에 4·3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에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연대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도민의 역량을 모으고 각계각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및 의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 행정기관을 포함한 124개 단체 활동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및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수시 전문가 및 유족 간담회를 개최를 통해 마련된 계획들을 토대로 활동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 8개 사업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

봉)에서는 안전 심사에 앞서 10월 16일과 10월 27일 이틀 동안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10월 16일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사무운영 보고,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4개소, 10월 27일에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현장 등 4개소 등 총 8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제주 드론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10월 3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철남 의원은 “드론은 기존의 2차원적인 공간 활용에서 국토를 3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국토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우리 제주에서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방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고 있고 이미 드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드론메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갖고 있으나 관련 조례의 부재로 체계적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또한 제주도청 미래전략국 윤흥석 국장은 “현재 제주는 스마트 드론을 기반으로 제주의 환경 및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제주도의 넓은 해양·한라산·도시·농경지의 환경·안전 모니터링은 드론뿐이나, 드론 상용화 서비스는 각종 드론 규제로 막혀있는 실정”이라며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드론기업연합회 송재근 회장도 “2018년 드론 세계시장규모는 약 145억불, 2020년~2025년 연평균 성장률은 8.3%에 달한다”면서, “제주도가 ‘드론 샌드박스’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위상이 상승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나 인력, 산업체 확보 및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도에서 드론산업의 확대를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라대 문석환 교수는 “제주가 드론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으로 드론산업의 발전의 기회가 있으나 강원도 및 경기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들 또한 드론산업의 집중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



정”이라고 하면서,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드론산업육성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이임평 교수는 “민간 수요 증가로 드론의 민수용/상업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다.”고 하면서, “드론 활용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실무부서의 드론 공간정보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제주에서 다양한 도정업무에 드론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철남 의원은 “오늘 여러 전문가들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주의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11월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코로나19 대응기관 현장 격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10월 19일 정민구 부의장,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함께 도 보건건강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시 보건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관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좌남수 의장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

황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빈틈없는 공공 의료 체계를 유지를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이 없도록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 심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388회 제

1차 회의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와 제주의료원 지원금 등

일부 출연계획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민간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 ADPI 권고안 등 집중 토론, TV·유튜브로 생중계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앞서 핵심 쟁점인 현공항 확장가능성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도민들이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이하 ‘토론회’로 약칭)가 열렸다.

토론회는 10월 19일부터 이틀간 각 4시간씩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와 방송중계의 편의 등을 위해 토론회는 주관방송사(제주MBC)의 협조를 얻어 방송사 스튜디오 등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국토교통부측 2인, 비상도민회의측 2

인으로 하고, 패널 멤버는 회차 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론회 사회는 갈등해결 전문가(강영진 한국갈등해결 연구원장)가 맡아 중립적으로 진행했다.

토론회 주제는 현 제주공항의 확장가능성에 관한 사항(ADPI 권고안 중 4개 쟁점 집중논의 등 포함)으로 하고, 토론의 대상 및 주요 내용도 이 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했으며, 도민들이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제주MBC)가 토론회 전 과정을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토론회 패널 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토론회 현장에 일반 방청객은 입장하지 않도록 하되, 주관방송사에서



사전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인터뷰한 영상을 제작해 토론회 도중에 상영하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패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제점, 그로 인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에는 박호형 의원을 대표로 해 부대표에 송영훈 의원, 그리고 강성민 의원, 박원철 의원, 송창권 의원, 임정은 의원, 조준배 의원, 한영진 의원 이상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에는 강성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부위원장에게 고은실 의원, 그리고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 이상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문화와 체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그런데도 도민들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 제주MICE산업 대응전략 토론회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 박호형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1월 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 MICE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를 감염시킨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관광 행사 등이 지연 또는 취소되어 서비스업이 GR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 서비스관광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의 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산업은 전 부문이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 이 시점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에서 제주지역 MICE의 현황 분석과 PCO(국제회의기획업) 기업 현황 파악을 통해 제주지역 MICE 산업의 위기대응 정책지원 방안과 제주지역 PCO

활성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주제발표에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MICE산업 활성화 방안 : 제주PCO 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주융복합관광연구소 장정훈 이사장이 발표했으며, 또한, 토론에는 강성민 의원을 좌장으로 김승배(제주도청 관광정책과 과장), 김종기(제주인적자원위원회 팀장), 박수범(포컨백스 대표), 유영신(누리 대표), 정중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실장), 조진훈(제주컨벤션뷰로 팀장)이 참여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MICE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기획·추진한 박호형·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MICE 유치실적이 2018년/2019년의 경우 유치 목표대비 실제 유치실적은 약 104% 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0년의 경우 8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3.4%(실적 55/목표 235)에 머무르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주MICE 산업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실현 가능성 의문” 도민의 문화·체육활동 보장도 노력해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0월 14일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장애인체육회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통해 제주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제주형 뉴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도 문화관광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항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역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문화·관광·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코로나 여파로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10월 21일에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날 안창남 위원장은 행정당국의 방역체계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통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적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0월 28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문화관광체육위는 보고서에서 고 예정자에 대해 “지금까지 제주관광공사의 재무구조 약화는 시내면세점 손실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직원들의 이직률 등 조직관리 미흡해 앞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직면한 조직관리, 경영능력, 재무구조에 대해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해 제주관광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경영인 출신은 아니지만 내·외부 협업과 조직 및 경영 혁신을 통해 충분히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재 유일한 수익사업인 지정면세점에 대해 상품포트폴리오 다양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의 임직적 한계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통해 제주 관광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아 ‘적격’으로 판단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산업 현장, 애월 LNG 시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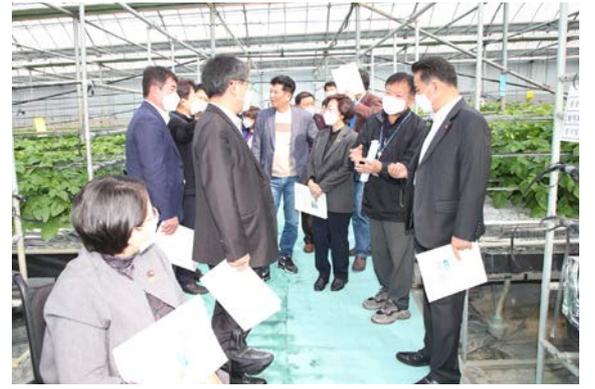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는 10월 27일 제388회 임시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농수축산 산업현장과 제주 LNG 가스분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첫 일정으로 발작물 우량종자와 신품종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원 농산물 원종장을 방문, 도내 농가에 종자의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는 수경재배 씨감자, 메밀 및 신품종감귤의 개발 및 재배 현장을 견학하고, 이어 지난 8월 28일, 생사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거로 한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어류양식수협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을 방문하여

배합사료의 수요동향 및 제조공정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양질의 액·퇴비 처리하여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장을 방문해 액·퇴비 처리공정을 견학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 자원화와 악취발생 최소화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한림읍에서 선도적으로 축산분뇨 냄새 저감을 실천하고 있는 양돈농가를 방문해 돈사발생 슬러지 주기별 배출 및 분무장치 연중 가동 현장을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애월읍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제주LNG 본부를 방문해 도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린뉴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기술세미나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57차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김희현 의원)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의원)는 공동으로 10월 30일 대회의실에서 ‘그린뉴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기술세미나’를 주제로 제5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고·

재난 상황 하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국토부를 주관부처로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부처사업인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기술 소개와 이를 통해 국내 제일의 관광 도시인 제주의 도시안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와 공동으로 계획·수립된 자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연구회 부대표인 흥명환 의원의 사회로 한국조명ICT연구원의 신상욱 협동책임자, 블루카이트(주)의 오신범 이사, 한국광기술원의 송상빈 본부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강정모 박사 등의 주제발제에 이어, 종합토론 및 협력 방안 논의에는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의 이무용 회장, (주) 제주넷의 정기영 대표와 제주자치도의 담당부서장인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김기홍 과장,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박경수 과장, 도

시간설국 도로관리과 한용식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희현 대표는 “현 정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IoT를 구축하여 도시의 범죄율 25%, 교통사고 50%를 줄이겠다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도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혁신기술을 실현해 미래를 여는 청정도시 제주에 맞는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청사진이 그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이제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추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각종 교통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타워의 역할을 하게 하는 신기술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공간혁신 통한 제주형 교육뉴딜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은 10월 22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일찍 찾아온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교육부가 사람 중심, 디지털 전환, 공간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제주도정에서도 제주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제주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수요자 중심과 공간 혁신을 통한 제주형 교육뉴딜을 제안했다.

정민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사태에 제주교육계의 대응 태세를 살펴본 결과, 교육청의 현 조

직이 적합한지, 직속기관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현재의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속기관이나 부서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기관 운영이 거의 멈춰버린 데에는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 뉴딜의 차원에서, 직속기관의 공간 재구조화의 첫걸음으로써, 도내 전역에 위치한 5개의 외국어학습관과 5개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해 학생의 입장에서 진로센터, 위기학생 상담센터, 학생복지지원센터,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외국어학습장으로 포괄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지역민의 평생



교육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전역을 제주교육청이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지역별로 해당 기관들의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지역과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형 교육뉴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 갑질신고 대응 체계 부실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은 10월 22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당국의 청렴교육에 대한 준비 태세 부족과 갑질신고센터 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영진 의원은 지난 3월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도 1등급 회복 유지를 위해 ‘청렴 제주교육추진 협력단’ 운영 계획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성조차 안 되어 있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실적이 교육청 중에서 최근 3년 평균 최하위를 받았고, 교육청이 실시한 청렴계약문화 설문조사에서 조차 공사계약에서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답변한 바가 있다. 특히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행위 등의 근절을 통한 행복한 직장 문화를 위해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 운영되는 갑질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총 11건의 갑질신고 제보 중에서 모두가 징계절차없이 ‘갑질아님으로 종결’되고 있고 신고한 사항의

처리도 해당 업무 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갑질신고를 해도 처리와 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갑질신고 처리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의 감사 부서 내에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접수와 직원조사, 처리 등 전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갑질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사항을 해당 부서로 업무 떠넘기기를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박주용 부교육감은 “갑질 처리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교육지원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생생 의정활동

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 교육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사진)은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부공남 의원에 의하면 그 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도박 중독과 관련된 누적 조기발견학생수는 1,587명이고, 누적 치료학생수는 642명이며(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

여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서 도박 중독도 늘어날 우려가 많다고 했다.

부공남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시책 추진, 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구제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예방교육 △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전담기구 설치 △ 협력체계 구축 △ 도박중독 치유 △ 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 개인정보보호 등이 포함됐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핵심 수소경제, 수전해 방식 연구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10월 2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 1.)에 따라 제주여건에 맞춘 수소경제 정책 수립·추진으로 신속한 대응 및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수소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

며, 정부 주관 수소중전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 10일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만 유독 제외되어 수소경제 관련 산업 등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수소 경제 확대를 위해서는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증가가 필요하고, 사용되는 전기도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므로 제주도 수소경제 정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그린수소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전해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신재생발전량 제어비중 증가에 따른 미활용 잉여전력(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하여 출력제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은 그린뉴딜의 핵심이며, 제주도 및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사 4·3 이제는 해결해야 좌남수 의장, 국회방문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정관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의안 내용에는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 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복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정작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

해 당사자로서는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역사적 책무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합의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는 민주적 정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아픈 과거사인 4·3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의 14개 광역 시·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전국 사회 각계 원로인사와 124개 단체가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11월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서울 해와동 소재)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연구 단체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사안에 대한 학술대회 세

미나 개최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회 구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도개선과제 연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평가시상 지원, 기타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분권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주형 분권정책 발굴 등 도의회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이 절실한 시기에 업무협약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지방자치 석학들이 포진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우리 도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맺게 되어 도의회의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뉴딜사업 성과창출 위한 워크숍 제주형뉴딜TF단, 도민 관심 절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행정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각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일 제주형 뉴딜사업 성과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처음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배경 및 지역실행전략'을 주제로 △한국형 뉴딜의 필요성, △국내외사례 및 시사점, △지역그린뉴딜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특히 지역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정부주도형 공모사업 방식으로 사업비 160억 중 71.3%가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발굴 측면에서는 기존 사업과 차별성 확보와 기후변화 적응관련 중장기 사업발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요약,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의의와 한계,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제주형 뉴딜종합계획의 의의로 CFI2030 추진관련 한계극복 및 도약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가속화의 계기"라고 피력했다. 반면 "제주형뉴딜종합계획의 사업비 전체 6.1조 원 중 약 5조원

이 그린뉴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계획실행의 한계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로는 △전담팀 구성 및 체계적인 예산확보 수행, △정책수요자의 파악 및 재정지출의 실질적 효과담보, △지역 내 일자리 및 경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을 통한 실행력 제고, △제주 미래 일자리와 삶의 질 변화를 성과지표에 반영, △아이디어뱅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제주에너지공사 이승환 신사업기획 단장은 "최근 제주형그린뉴딜 국비공모사업 유치사례로 3년 간 총220억 원이 투자되는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을 소개하며 그린뉴딜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의 효과로 그린수소 기반 사업화를 통해 △과제종료 후 3차 년도에는 480억 원의 사업매출, △2030년까지 고용창출 94천명 및 1,56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환 단장은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이란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일명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재생에너



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미세먼 지원인물질)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본 실증사업을 통해 생산된 그린수소와 미활용 전기(용량 2MWh급)를 활용해서 수소버스 9대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30대 충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형뉴딜TF단 현길호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제주형 뉴딜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의회와 도는 그 기능을 초월하여 협력하고 있다. 오늘 워크숍은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차원에서 과제를 발굴·제안하기 위한 첫 자리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제주형뉴딜TF단은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구성하였고, 현길호 위원장은 제주형뉴딜TF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좌남수 의장, 의회혁신 제4호 '정례회의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11월 5일, 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정례회의 조례'라 한다)을 오는 11월 16일부터 개최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1대 후반기 좌남수 의장의 취임에 따라 의회 조직혁신과 의원 및 직원역량 강화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의회혁신기획단에서 의회혁신안 제4호로 마련했다.

현행 정례회의 조례에서는 연간 회의일수 130일 이내, 정례회(1, 2차 포함) 60일 이내 및 임시회 20일 이내의 회기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각 150일, 80일,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보다 더 일하는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좌남수 의장이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좌남수 의장은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까지도 우리 의회는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더욱 왕성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좌남수 의장은 "향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조직을 혁신하고 의원 및 직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예·결산 심사기법 중심 사무처 직무연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대표 이경용)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에서는 11월 6일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대상으로 의정활동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찬은 2021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경제포럼 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대상으로 예산 기본 및 예·결산 심사기법 등 사전에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자 마련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행정자치연수원 연구 소장으로서

재직중인 주영진 교수로부터 '지방의정활동과 예산결산심사' 관련 내용으로 예결산 심사기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3시간에 걸쳐 강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재정경제포럼(대표 이경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이번 직무연찬을 통해 배우고 익힌 예산심사 실천 기법들은 오는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역량강화는 물론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업무역량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도의회가 속도 'UP'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읍)는 11월 4일 '특별자치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2011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시작되었다. 이후 민선6기 2017년 1월 23일 새로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6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분리, 행정시장 정

당공천배제 등 3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대두로 약 10년간 도민사회의 논의가 있어왔다"고 전제한 후 "행정시장 직선제는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회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논의와 방향', 양진철 미래리



서치 소장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여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전 대표, 제주국제대학교 김상명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주교통네트워크 선명애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송중식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시로 읽는 제주



한림수직

현택훈

어머니가 혼수로 가져와
 섬의 반이 한림이네
 함박눈 쌓여
 하얀 스웨터 입은 겨울밤이
 어린 양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한 벌이네
 아일랜드 수녀님하고
 성당에 내린 눈을 쓰는데
 제주도에는
 눈이 안 오는 줄 알았다며
 스웨터 주머니에선
 알사탕이 나와 나폴나폴
 그 무늬의 지도 따라가면
 성당 강아지도 따라와
 신부님 닮은 눈사람도 만들었다며
 무덤 위에 내리는 눈은
 담요를 덮은 것도 같은데
 삼동처럼 까만 눈동자에
 떨어지는 결정(結晶)
 하늬바람 불어오면 손이 곱아지고
 눈은 뱅디에서 온다고
 차가운 것들은 다
 그곳에서 온다고
 겨울밤 이야기
 산질에서 머뭇거리고

웹진으로 된 <월간 시화사>에서 이 시를 읽었다. <월간 시화사>를 만드는 시화사 출판사는 시와 그림과 사진을 줄여서 '시화사'인데, 이 작업법처럼 웹진 <월간 시화사>는 단순하다. 시, 그림, 사진 등이 실려 있는데 단순한 만큼 단순해 읽을 수 있다. 진수성찬보다 정갈한 식탁을 닮았다. 쟁반과도 닮았다. 많이 담아 보았자 나르는 사람만 무겁다. 혼자 있을 땐 쟁반 위에 한 끼 식사를 차려 먹기도 한다. 여럿이 살아도 혼자 살아도 쓸쓸한 삶이 많고, 아무리 쓸쓸해도 우리는 식사를 한다. 혼자 먹는 밥처럼 시와 그림과 사진과 음악을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소박한 예술 웹진이다. 이 웹진은 아마도 서귀포의 조그만 서점의 장사철학과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게 오래 남는 법, 인터넷의 다양한 블로그들과 함께 긴 해변의 모래처럼 쌓이고, 모래사장의 발자국처럼 지워질 것이다.

이 시는 참 아름답고 따뜻하다. '한림수직'은 오래 전 한림에 정말 있었던 회사(상표) 이름이다. 지금은 없지만 그런 회사가 있었던 흔적만으로도 따뜻한 스웨터를 걸 찬 것 같다. <월간 시화사> 7월호에 실린 시는 현유상과 김경언의 시도 실렸다. 현유상은 연극 배우이다. 시옷서점에 성큼 걸여와 이제 갓 시를 쓰기 시작한 청년이다. 막동산 문학회 회원이다. 김경언 라음 동인이다. 병명을 모르겠지만 우체국에서 일을 하다 너무 아파 병원에 간 이후로 삶이 바뀌었다. 지금은 중산간 요양원에서 생활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제 시를 쓰는 현유상과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김경언의 시가 실린 것만으로도 나는 <월간 시화사> 7월호가 여름에 입으면 참 시원한 민소매 셔츠 같다. <월간 시화사>는 무명이라는 바늘에 꿰어 시와 시를 엮는다. 오늘도 따뜻한 밥에 투명한 물을 부어, 찬지 따뜻한지 모를 밥을 넘기듯 시를 읽어 본다.

글 김신숙/시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1회	총119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9회/78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1.(목) (8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하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6.(목) ~7. 28.(화) (13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제385회 임시회	8.10.(월)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9월	제387회 임시회	9.16.(수) ~9.25.(금) (10일)	· 주요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8회 임시회	10.13.(화) ~10.30.(금) (18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90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청탁금지법 Q&A



Q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6조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의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 즈음한 제주행정체제 변화 모색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61년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된 후 약 35년만인 1995년 7월 1일 완전한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어느덧 26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수단이자 민주주의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주민 본인의 자기결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문제해결을 주민(국민)의사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제도운영 상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요구가 선거공약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추진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 또한 있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중에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 바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각 지방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치제도 운영이 국가발전을 견인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2002년 천혜의 환경을 가진 동북아시아의 관문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여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특례 개념인 특별자치도를 설치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 가장 특징적인 조치는 기존의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을 폐지한 점이다. 당시 주민투표를 거치는 과정에서 붙여진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등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즉 시장·군수가 사라지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겠다는 의미였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2개의 행정시체제로 지금까지 운영돼 오면서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행정의 민주성·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10여년 간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도민사회 논의가 지속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 3개 권고안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 등 권고문 수용을 최종 결정 하였고, 행

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된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시장의 주민책임성을 강화하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장을 직접선거’함으로써 주민참여를 더욱더 공고히 할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도의회에서는 도민참여와 민주적 행정을 위한 대안으로써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하여 지역국회의원과 의면담, 세미나 및 토론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방문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행정시장 직선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학술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논리개발 등 제도적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나갈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오직 도민들의 공감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오늘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바란다. 주민들이 함께할 때 제도적 완성은 그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기록자치의 시대와 제주기록원 설립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최고의 의무는 타인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억하려면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우리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후세들이 계승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실제로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흔하다. 1992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UNESCO MOW) 사업을 창설한 이윽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으로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2001년 승정원일기, 2009년 동의보감, 2013년 난중일기와 새마을기록물, 2015년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이 각각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우리의 제주4·3기록물도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록유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록물 관리 기관인 기록관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첫째 기록관은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둘째 기록관은 시민들에게 정보의 이용을 장려해 정보의 불평등을 완화해줄 수 있다. 셋째는 기록물이나 기록유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넷째 기록원에서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기록물들을 보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에서는 기록물 보호·관리, 국민과의 기록물 공유 및 활용, 기록관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고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합적 기록 관리의 중요성 등으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이 개원했고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도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록자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과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공론화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기록물 관리 현황을 보면 제주도청 90만5724권, 제주시 17만3493권, 서귀포시 9만1153권 등 총 117만370권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전문성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제주시청의 경우 문서고가 오래된 건물 지하에 10개 실로 분산돼서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고 전문적·체계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해 우리 후세들에게 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일이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록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도정의 강력한 의지와 도의회와 협치, 그리고 도민들의 지지만 있으면 기록원 설립은 요원하지 않다.

이제 모두가 역량을 모아 제주기록자치의 시대를 위한 제주기록원 설립 추진에 동참하자.

강성민 위원장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주자치경찰 제2막을 위한 권한 부여



최근 광역자치경찰제 추진 방향이 담긴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주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타 시·도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도 잇달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대입장의 내용은 개정안에 따른 경찰청의 임무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수사경찰은 강력범죄 등의 수사, 자치경찰은 지역 생활안전과 교통·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중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쓰레기 투기 단속과 청사 경비,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단순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반대입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개

정안 내용 이상 자치경찰 사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 유일 제주자치경찰을 운영하면서 관광·교통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가족분노 불법배출 등 특별사범 업무를 잘 수행해 왔고, '18년 4월부터는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아동청소년·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사무의 일부와 인력을 단계적으로 이관 받아 확대 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진정된 자치경찰제 모형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

직장협의회에서 우려하는 점이 제주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제주자치경찰이 처음부터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는 좀 더 체계적이고 도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자치경찰은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고, 현 정부의 광역자치경찰

제 성공적 도약을 위해서 더 많은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개정안 내용대로 통과되면 지금까지 제주자치경찰이 쌓아온 성과와 역할이 사라지게 되고 제주특별법에 의한 권한이 오히려 축소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개정안 발표 이후 자치경찰단에서는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면서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 및 성과 등을 보고 함으로써 존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자치경찰이 훗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주어야만 이 진정한 광역자치경찰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진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우리가 나선다

제5기 의회 음부즈맨 56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의장 좌남수)는 11월 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기 음부즈맨 출범·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음부즈맨은 43개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 중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 총 56명이다.

임기는 2022년 6월말까지로 의회 상임위와 부합하게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도내 각 지역에서 본격 활동을 하게 된다.

출범·위촉식은 1·2부로 나뉘 1부는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그리고 2부엔 음부즈맨 운영계획 설명 및 음부즈맨 운영관련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각 지역에서 신앙 많은 주민들로 제5기 음부즈맨이 구성돼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 제보를 해주신다면 의회는 적극 수용하

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음부즈맨은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 지역개발·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음부즈맨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상황에 따라 선진지 비교시찰,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지원, 음부즈맨 수첩제작, 우수 음부즈맨 표창, 음부즈맨 활동보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음부즈맨 제도는 지난 2013년 시작돼 지금까지 총266건의 각종 제안제보와 건의사항을 접수해 처리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소한 현장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좌남수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장(사진 오른쪽)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17대 전반기 부회장에 선임됐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백양호텔에서 올해 제5차 임시기회를 개최하고 전반기 임원 선출 안건을 비롯해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에 관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 14

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좌 의장은 “이번 부회장 선임에 계기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님과 함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1991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발족한 협의체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회에 김준택 연구위원 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2일 개방형 직위인 농수축경제전문위원(4급 상당)에 김준택 농수위 정책연구위원(사진

을 임용했다. 신임 김 전문위원은 향후 2년 동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의 각종 조례 제·개정과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해양수산 분야 투자 효율성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0월 16일 제주 해양수산 분야(해양수산업 구원 포함)의 투자 사업을 분석한 후 경제적 성과를 평가한 ‘해양수산 분야 사업성과 평가’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9년 중 제주지역 해양수산 분야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8.9%였으나 동기간 중 어업생산량은 연평균 1.2% 증가하는데 그쳤고,

어업생산액은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생산어종의 다양화와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19 시대 보건의료 협력방안 모색



김경학 의원실과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분과가 공동으로 주최한 ‘코로나19시대, 장애인지역

사회통합돌봄과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수축경제위,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10월 13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찾았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화상 상담회로 변경돼 열렸다.

공모로 선정된 도내 수출기업 40개사(화장품 19·식품류 19·기타 2)와 KOTRA 제주사무소와 해외통상사무소(상해·동경) 등의 협조를 통해 발굴한 해외바이어 6개국(중국·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인도네시아) 60개사가 참여했다.

제주문화관광행사연합회 정책간담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의원, 이도2동)는 10월 16일 올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공연 및 이벤트 등 관련 업종 모임

인 제주문화관광행사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